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7056)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 TEL 02-596-3171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Home Page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8월 1일

# 북한 개발소식

# 08

2018 August

통권 154호

###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변화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찰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 소식** 2018 August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변화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찰**



	<p><b>01</b> 권두칼럼 북한의 변화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찰</p>	<p><b>10</b> 칼럼 1 · 송인호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p>	<p><b>19</b> 칼럼 2 · 조정현 북한인권: 의도적으로 유 보된 문제인가 무시되고 잊혀진 주제 인가?</p>
<p><b>24</b>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6)</p>		<p><b>31</b> 북한소식</p>	
<p><b>37</b> 서평 누가 북한을 움직이 는가</p>	<p><b>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b> 한국 KIS·영국 BBC·독일 ZDF·영국 다큐멘터리 한국 KIS·영국 BBC·독일 ZDF·영국 다큐멘터리</p>	<p><b>40</b> 기도제목</p>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에 대한 미행과 도청 등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현지 조선족 교 회들 역시 강화된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 의지를 꺾으려는 원수 마귀의 흥계 앞에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처에 도사린 위험을 잘 분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와 어려움이 오히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밑 거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 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 민들을 생각할 때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한 음질로 현장에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을 비롯하여 극동방송과 북방선교방송 등 동역하는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 하고 선명하게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상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 도합니다.
8.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 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정세 변화에 비해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 너무 먼 주제인 듯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 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 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8월 1일



## 북한의 변화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찰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수시로 판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서로를 죽일듯이 으르렁거렸던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게 될 줄이라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핵폐기를 조건으로 대화에 나선 것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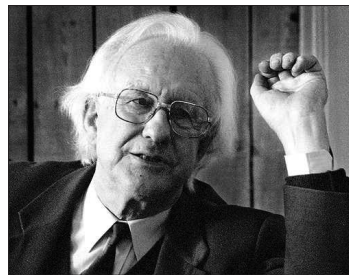
이러한 외교적 변화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인지 그간 최악의 독재자로 악명을 떨쳤던 김정은도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핵을 과감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의 정권의 생존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에 대해 국제사회는 적어도 이전에 가진 편견, 즉 북한과 김정은은 말이 통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제 불능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수정하는 듯 하다.

많은 성도들에게 현 상황은 반가우면서도 혼란스럽다. 한반도 평화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 대상인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북한 내의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기독교 박해 등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과 제대로 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의 북한의 전향적 태도도 정치적 쇼로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전쟁과 분쟁이 가져올 엄청난 비극을 생각한다면 결국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고민을 찬찬히 나누면서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적극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학의 창시자 요한 갈통 (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분류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강대국들간의 힘의 균형이나 거대 제국에 의해 전쟁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도 평화로 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관점의 평화로 일컬어진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 압제와 착취가 중단되고 폭력적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평화라고 본다. 즉 정의가 함께 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다<sup>1</sup>.



〈노르웨이 출신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통 (1930- )〉

성경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바로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마 6:10)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암 5:24) 하라는 선지자의 교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공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개혁주의 지성인 니콜라스 월터스코프 (Nicholas Wolterstorff)는 그의 저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때까지’에서는 정의란 진정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전제조건으로서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다가가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동반 타락한 사회 구조의 질서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회질서의 변혁에 참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sup>2</sup>.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또 평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 평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넓게 보면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 자체가 불완전한 평화이고 그 안에 폭력적인 구조가 존재한다.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을 사이에 두고 수백만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고 특히 북한은 핵을 통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보장하고자 한다. 비록 전쟁은 중단된 상태지만 진정한 평화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 내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김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는 도구로 분단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병로 교수는 북한 체제가 한국 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고 생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자립체계를 바탕으로 한 병영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sup>3</sup>. 북한 정권은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병영적 국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미제 원수에 대항하고 남조선의 억압받는 대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위대한 아버지 영도자 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제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주체사상을 주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해왔다. 여전히 10만명 이상 수감되어 있다고 파악되는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 관여 전략을 통한 한반도 평화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평화롭지 못한 구조의 타파를 위해서는 북한의 내외적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넓은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화두라면 단연 북핵 문제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강경 매도적 입장을 대변하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온건 비둘기파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USC)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방법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관여, 즉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sup>4</sup>.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관여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북한이 외부세계에 문을 더 열도록 조건없이 북한과 교류할 때 북한 내에 자본주의적 가치가 보편화되고 국제적인 규범이 공유되고 국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강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과의 화해, 협력, 교류가 북한을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빅터 차 교수는 화해, 협력, 교류 자체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는 회의적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관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봉쇄와 제재로 북한을 바깥 세계와 완전 분리시키고 계속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북한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 즉 테러나 군사도발 혹은

<sup>1</sup> David P. Barash & Charles P. Webel, (2008), Peace and Conflict Studies, CA: SAGE Publications 2008, 4-5.

<sup>2</sup> 하성만, (2013),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도시선교를 위한 개혁신학의 토대와 전략: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에 나타난 니콜라스 월터스코프 사상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27호, 295-296.

<sup>3</sup>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북핵에 실재하는 감춰진 사회의 심층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sup>4</sup> Victor D. Cha &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이미 외부세계와 분리된 상태인 북한에게 외교적인 제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관여가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북한이 외부세계와 교류하면서 이익을 얻고 국가 경제가 외부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북한의 움직임을 일정부분 제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무조건적인 교류가 아닌 핵포기를 조건으로 한 관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11년 함께 방한했을 당시 데이비드 강(좌) 남가주대교수와 빅터 차(우)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의 내부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은 유효하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고 남한 및 외국계 기업이 다수 진출, 투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법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법률이 아닌 지도자와 당의 지침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과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지도자의 유혹이나 높은 관리의 말 한마디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 법률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도 해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종교적, 교조적 통치에서 법에 의한 통치로 통치 스타일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햇볕, 장마당, 법치 - 북한을 바꾸는 法”의 저자 이종태씨는 개성공단 등 이전의 경제협력이 북한의 법에 의한 통치를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sup>5</sup>.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도 북한 내의 사회 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한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경제 변화를 분석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의 상당수 주민들이 사적 행위와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열악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다고 보았다<sup>6</sup>. 이러한 민중의 요구가 높아진다면 기존 통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이종태. (2017). 햇볕 장마당 법치: 북한을 바꾸는 법(法), 서울:개마고원.

6 임을출. (2017).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서울:한울.

경제 교류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와 외래 정보 유입으로도 이어진다. 그간 북한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보 통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외부의 정보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 한국의 드라마와 방송 프로그램이 젊은 계층에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정보 유입과 확산은 광범위했다. 비록 북한 정권이 최근 강력한 주민 통제와 처벌로 이를 억제하고 있지만 외부세계와의 교류의 문이 더 활짝 열린다면 북한 정권은 기존의 통치체제의 한계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 헬싱키 협정의 교훈과 인권 문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만이 전부는 아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한의 진실성 있는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개선 관련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차 ‘3층 서기실의 암호’는 실제 북한이 인권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분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의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많은 시도와 애를 써왔지만 번번히 유럽국가들이 제기한 인권 문제가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이를 타개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화에 나서는 척하기도 하고 전면적인 무시 전략을 시행하기도 했던 북한이지만, 결국 2014년 UN COI 특별보고서 발표 등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가 전면적으로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외부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이니만큼 아무 대가 없이 단순히 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분단 상황이 바르게 종식될 수 있다면 북한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불법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동서간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와 헬싱키 협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서유럽의 자유진영과 동유럽의 공산진영은 유럽 내 불필요한 분쟁과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7 태영호. (2018). 3층 서기실의 암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증언, 서울: 기파랑. 172-184.

교류 협력의 기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의 협의 끝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Helsinki Final Act, 1975)를 승인했다. 이 의정서는 4가지 바스켓(Basket)으로 이루어 있는데 각각 안보, 경제교류, 인도주의적 협력, 국가 간의 국민과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처음 헬싱키 협정이 시작될 때는 각 진영 나름의 궁극의 목표가 있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에서는 동유럽에의 소련의 영향력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며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으로부터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융통성 있는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한편 미국은 동서 화해 분위기를 통해 유럽의 군축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동유럽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안보 위협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이러한 각 진영의 의도가 맞아 들어가면서 약 3년여간의 협의 끝에 최종 의정서를 승인했다. 서독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안보와 경제협력 부분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인권 및 인적 교류를 중요한 협상 결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헬싱키 협정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었지만 각 국가의 정상들에 의해 비준된 정치적인 규제력을 발휘하는 문서로서 공산권 붕괴 전까지 동서 교류의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주었으며 동구권 내 인권 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외교적 여지를 넓혀주었다.



〈1975년 8월 헬싱키 조약에 서명하는 브레주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럽에서 이루어진 헬싱키 협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북핵 문제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대화는 핵 문제와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 등 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 협력 부분에도 일정부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안보 중심의 대화에 헬싱키 협정과 같이 인적 교류와 사상,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국제적 개선 압력이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헬싱키 협정과 같은 인권 개선 내용이 포함된 협의가 꼭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아직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에 참여하는 미국이나 남한이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UN COI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적인 화두로 이미 급부상한 만큼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정을 위해서는 인권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통해 강하게 압박한다면 국가간 대화에서 관련 주제가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고 북한이 자신의 정책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종교적이고 교조적 체제 하의 주민 통제와 인권 탄압은 오히려 정권에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북한이 관련 정책 개선과 통제 완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용서와 화해를 새로운 한반도의 가치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성경의 용서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차별적으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바른 용서의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의를 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수년 전 영화 ‘밀양’이 기독교계에서는 화제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기독교적 용서가 어떻게 잘못 이해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영화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 속죄와 구원에 대해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 가해자 위주의 용서로 전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되묻는 영화였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용서를 이야기할 때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용서는 먼저 진실을 직면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또 용서의 주체도 현재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폭력 아래 신음하는 이들이 주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한의 우리가 어쭙잖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이신애(전도연 분)가 자기 아들의 살인범을 면회하는 장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면회를 갔던 신애는 그러나 살인범이 자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하며 피해자인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

8 이인배, (2011), 헬싱키 프로세스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116- 117.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준비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반성과 회개가, 피해자는 용서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기 앞서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독일도 잘츠 기터 중앙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해 인권 침해 기록을 정리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서독 정부는 전체 독일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천명함은 물론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sup>9</sup>. 현재 UN의 북한 인권 센터와 남한이 북한 인권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한인권기록소 등의 활동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인권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침해 행적이 잘 기록되고 정리되는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때 북한 정권이 이후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인권문제가 불뚝이 튀지 않도록 정책과 행동을 주의하고 개선하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다.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잘츠 기터(Salzgitter) 시에 설치되었던 중앙범죄기록소 (조선일보 자료사진)〉

결론: 북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분단 이후 70여년의 기간 동안 북한과의 협정이나 대화는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한이나 미국이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북한의 강짜와 일방적인 파기가 두드러졌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핵 무기 개발 성공 자체가 정권 안정 보장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북한은 핵을 가지고 대화에 스스로 나섰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때보다 높다.

그렇지만 외교무대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변화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보인다. 그보다 김정은 정권 유지와 좀 더 큰 야심, 즉 강성대국의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종교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정권 보호에 현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어느때라도 원래의 도발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감성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김정은이 협상장에 나와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한다고 해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정권의 근본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폭력적 구조를 제거하고 북한의 변화를 독려하기 위한 계기로 이번 대화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할 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9 안지호 외. (201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서울:통일연구원. 118-120.



##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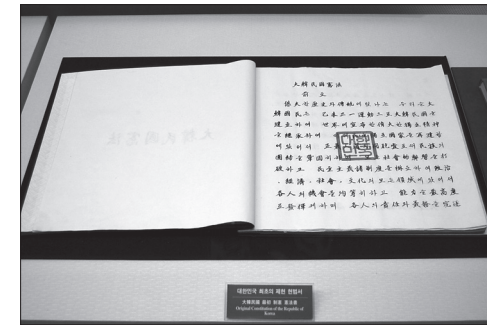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지 벌써 한 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막혀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돌파구로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2월 공포된, 이른바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제재의 완전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뿐 만 아니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근본적인 인권 개선책을 취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비핵화와 일정한 정도의 체제보장이라는 북미간의 합의가 장차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침해적 독재국가와의 평화공존이라는 딜레마’에 본격적으로 처하게 됩니다. 이미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간의 문제 차원을 뛰어 국제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유엔총회에서는 이미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는 4년 연속으로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이른바 과거청산의 차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이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모든 ‘대한국민’의 사명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제헌 헌법부터 존재했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물가치(沒價値)적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여, ‘통일의 목적적 한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국가수립)’와 ‘방법적 한계(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 이 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 해석에 따르면 국가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북한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지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

인권침해 정권과의 평화공존의 딜레마는 과거 교류협력이 지금보다 활발했을 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이 딜레마는 더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적 교류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남북교류과정에서 남한에 온 북한 측 고위인사가 탈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은 그자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북한이 교류협력을 명목으로 정부 및 민간 모두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슷한 사안이 문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후순위로 돌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 북한의 인권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교류협력에만 집중하다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가치관 아노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평화공존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북한과의 평화공존,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위해 북한의 현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과거 경제발전(생존권)의 목적으로 인권(자유권) 문제를 후순위로 다뤘던 70~80년대 개발독재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해왔던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 되는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모순을 느끼며 때로는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안의 내부적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측면에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인적교류협력을 통해 크고 작은 정보가 유입되면 북한주민들이 외부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들이 처한 자유권 침해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연히 교류협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권 침해가 본질인 북한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현대사 및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내부와 외부에서의 지속적 문제제기 없이 독재정권 스스로 자유권 침해 문제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보장 논의에 수반하는 세습독재국가의 지속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단어 속의 ‘정상국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단지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가 나아진다고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확립,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정부구성, 정치적 자유, 기본권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확립된 국가, 즉 1인에게만 존엄이라는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 ‘인권 존중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정상국가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지기 시작했던 80년대였지만 87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4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막연한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임을 명시하여 불가치적 평화주장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 바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을 이유로 한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 주장은 우리 헌법이 예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 인권, 정의’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평화권의 내재적 한계에 반하는 주장이며, 과거 안보(평화)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을 당연시한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치하의 논리의 반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교류협력 중단이 두려워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의 축소와 위축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교류협력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안보불안을 야기하며 평화유지의 대가로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의 축소와 위축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즉,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칫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왔던 가치에 대한 침묵, 또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를 방조하는 일종의 위선적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파리를 향하는 KTX를 타고 북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기본적인 선거의 자유도 없는 북한주민들을 바라보며 ‘경치가 참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지나가는 관광객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꽃제비. 실제 인권 침해를 받는 북한의 서민들의 목소리는 남북 평화 무드에도 쉽게 소외되고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자료사진)〉

만일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정치적 자유 확대, 특히 과거 고문, 처형 등 자유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침해의 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북의 정권간에는 ‘서로 불편하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북한주민 전체로 보더라도 인권침해의 피해계층은 주로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정치·경제적으로 약자인 하층 계층인 관계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점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북한주민들의 전체 의사를 존중하되 그렇다고 단순히 북한주민 다수의 의사에 수동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대신 제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과거 우리의 70~80년대 시절, 엠네스티 등 외국에서 권위주의 정부 하의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해준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나치 청산의 경우도 나치에 대한 기소, 재판 과정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나치의 만행에 대해 일반 독일 대중이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 나치청산에 대한 지지여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인권침해의 실체가 미처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남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대중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대변해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며 먼저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정부 내에서 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 움직임에 대한 위축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동서독 분단시기 서독은 다른 건 많이 양보해도 인권에 대한 이슈는 동독이 아무리 항의해도 끝까지 원칙을 유지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 동독도 말로는 강하게 항의해도 현실적으로는 서독의 입장을 수용하고 다른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으니 교류협력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이던 1973년 7월 31일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동서독기본조약 제6조에서 ‘동서독 양국이 대내외문제에 있어서 상호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서독기본법(헌법)은 제116조 제1항에서 동독주민들을 서독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서독은 동독주민들을 서독인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동독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고, 서독정부는 동서독 경계에 있는 철조망, 발포명령 등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변경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동독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류협력이라는 이른바 두 트랙 정책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동독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인권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에 성공한 서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굳이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세대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사회의 자유, 풍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북한을 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치의 중요성을 북한 현 정권에서도 깨닫고 배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족적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20~30대 세대, 보편적 세계시민적 인권과 민주주의식으로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통일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인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이슈는 중요합니다.



〈동서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사살당한 동독인 희생자들의 묘비〉

평화의 가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 한반도의 비극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지고(至高)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치열한 교전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로부터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 ‘진정한 평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평화라는 명목 하에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다면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세대가 “그 때 정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답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진상규명, 가해자처벌 등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갈등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알려진 북북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일제강점기 과거청산실패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기에 따른 전략적 태도 또는 한시적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과정에서 근원적 방향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상기하고, 또한 간과될 수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슴 한 편에 간직하고, 혹여 평화라는 단어 뒤에 나와 내 가족의 삶의 평안과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숨어있는 건 아닌지, 이 한반도의 가장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혹여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참으며 지혜를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자칫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왜곡된 현상유지적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정의’라는 가치 판단이 약화되거나 배제된 평화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개인적 안위조차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극과 참상을 보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해서는 힘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기억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70년간 먼저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외침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통령 간선제 유지 담화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1987년 6월 항쟁은 결국 군부 독재 정권의 종식을 가져왔다. 사진은 6월 항쟁 말미에 치뤄진 이한열 열사 장례식 행렬〉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북한의 현 정권 입장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여년이 흐르면서 장마당 민심 등을 지켜보았으니 정권의 존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치범수용소 등 탄압과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민심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부디 북한의 집권층이, 자신들의 체제 정신이 당초 그들의 선조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로부터도 한참 변질되었음을 자각하고, 1인 가문을 떠 받드는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에서



벗어나, 예전 1948년 북한헌법 제2조에서 처음에 규정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북한의 현 정권의 입장에서 간절히 원하는 체제보장은 미국 등 외국이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공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독주민들의 동독 혁명과 같이 북한주민들의 내부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변화, 이것은 그 어떤 나라도 막아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심을 얻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는 ‘인권침해 세습독재정권과의 평화공존’이라는 딜레마적 과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인권’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목표 하에, ① 국제사회와의 공조, ② 정부 기관 상호간, ③ 정부와 민간 상호간의 교류협력과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④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개선의 측면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는 달리 동서독기본조약은 제2조에서 “동서독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주권평등, 독립, 자주성, 영토보존, 자결권, 인권보호에 관한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각 나라의 주관적인 인권 기준이 아닌 ‘유엔헌장’에 따른 ‘인권보호’라는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해 북한은 한편으로는 반발하면서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인보호법 제정 등 이에 호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평화협정 등 합의과정에서 인권 이슈를 위 동서독기본조약에서와 같이 ‘유엔헌장에 따른 인권보호’라고 규정하는 것도 북한의 현정권을 설득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동맹관계인 미국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쿠바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에도 찬성해왔던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인권 이슈 역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 북한의 현 정권과 상대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를 통한 방법 외에 북한의 현 정권을 직접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인권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기가 도래한다면 통일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담당할 한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또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2016년 제정은 되었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 제대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 12월 21일, 서독 에곤 바 수상실 장관과 미카엘 콜 동독 각료회의 국무차관 간에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모습〉

또한 민간에서도 교류협력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이슈를 제기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위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북한에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교육 측면에서 북한인권 이슈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여 추구되어온 핵심 가치이자 통일의 이유와 목적과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교류협력 자체도 파급효과를 통해 인권의식 고취 등 인권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류협력과 인권개선을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도 안됩니다. 특히, 과거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동독지역에 퍼지게 하고 동독주민들의 민주주의식이 고취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제 등 학술교류 등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체계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북한 내의 학자,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권개선(인권의식 고취)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협력’과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이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면 단기적 평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이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북한 피해계층을 볼 면목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듯이 경제발전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한계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평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불안한 평화도 지속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일청산 실패로 인한 사회갈등이 지속된 것처럼, 일시적, 잠정적 평화라는 명분하에 정부차원에서는 완전한 침묵, 나아가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터부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계속 나아간다면, 향후 국내적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될 뿐 만 아니라 이미 북한인권문제를 이른바 체제불법청산(이행기 정의) 이슈로 파악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계층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도 큼니다. 이미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세계적 관점에서 ‘보편적 인간 존엄성 존중’의 가치관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록 현실적 평화유지의 필요성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통일의 목표’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임을 잊지 않고, 우리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과 ‘민주’, ‘자유’ 등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 시기를 살아갔다고 조금은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원칙과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전략적 방법에 대한 균형있는 자세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북한인권: 의도적으로 유보된 문제인가 무시되고 잊혀진 주제인가?

조 정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인권 문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뜨겁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진행되는가 하면, 스트롱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비관과 낙관이 혼재하는 반면, 많은 국민들은 남북통일이 더욱 앞당겨진 것 같은, 사실 현실과는 그리 크게 상관없는, 희망 섞인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전쟁까지도 걱정하던 한반도에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곳은 또 있다. 북핵 문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함께 다뤄지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탈북자를 국정연설에 초청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더 기대가 컸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이제 공개적으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핵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북한인권 유보론이 한국의 친정부 전문가를 통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중요성은 인정함에도 전술상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천덕꾸러기 문제로 무시되거나 이 중요한 시국에 이미 잊혀진 주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 수년 간 북한인권 문제는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주요사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

6. 25 전쟁 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어느 외국인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우리 선배세대들의 피 땀 어린 헌신과 수고로 당당히 이 땅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터전이 놓이고 그 위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담은 장미꽃이 피어났듯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게만 보이지만 이 한반도 전체에 다시 한 번 그 장미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 이제 우리들의 선배 세대들이 해냈듯이 이제 우리가 후대를 위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위해 해내야 할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깨위에 놓여 있는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긴 글을 마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북한인권이 획기적·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소외될 위험을 내포한 ‘잠정적 평화’의 단계가 조속히 지나가고 분단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평화, 회복과 치유의 평화’가 이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행악자의 득세에 분노하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시편 73편과 하박국 기자들의 그 깨달음이 오늘 압제당하는 북한 기층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행악자들의 번성하는 듯한 모습에 깊이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결정된 최후 승리와 최후 심판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현실의 악함에 대해 낙심하거나 이 땅에서의 악인의 득세에 대해 증오심과 분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궁극적으로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처럼(마태복음 13장 43절) 천국에서 상 주실 것임을 믿기에 그 아픔에 시달려 내 존재가 무너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억압받는 모든 북한 기층주민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북한주민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 전 COI 조사위원장〉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고, 이에 더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여러 권고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하여 관련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기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대응법이었다. 90년대에 본격화되어 10년 정도 이어지던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접근은, 2013년 3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컨센서스로 설립됨으로써 전환점을 맞는다. 즉, 만성적인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범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 임무를 COI에 부여한 것이다. 2014년 2월 발표된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부 당국에 정책적 책임이 있는 90년대 대량아사 사태,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 조직적 강제실종 사건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범죄로 결론내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로의 회부를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량인권침해 사태, 즉 국제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2P) 이행을 강조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COI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북한인권 결의를 현재까지 매년 3월과 12월에 각각 채택하고 있으며, ICC 회부 권한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2016년에는 유엔에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설치된 바 있고, 서울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할 유엔 인권사무소가 설립되어 현재도 활동 중이다.



〈UN 북한인권사무소 소장 시나 폴슨 (Signe Poulsen)〉

2016년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 3개국은 모두 자국의 국내 법률로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북핵’ 관련 대북제재에 그치지 않고, 2015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북한‘인권’의 가해자를 겨냥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또한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북한제재강화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기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사유를 추가하고 제재 대상을 선정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입국금지 등으로 이루어진 대북인권제재 대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은 과거에 비해 보다 공세적이고 가해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국제형사법 및 표적제재식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색이다. 즉, 지도층에 구체적인 경고 메시지를 줌으로써 독재체제 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근본적 정책방향전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공감대를 확인하고 국제법으로 확립된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실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 향후 북한인권 개선 방향

북한인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시되거나 잊혀져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히 당위적인 문제로만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실로 무시하거나 애써 잊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선히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국제공동체의 뜨거운 관심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관련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희망적 해석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인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관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 간에 통합적인 시각을 취하면서 상황에 맞게 직접적/간접적 접근 및 비판적/협력적 접근을 탄력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국가 내 정부부처 간, 국제기구 및 NGO와의 역할 분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앞서 살펴본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는 북한과 대화 당사자인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논리적 근거가 갑자기 전면 부정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에서 그리고 국내외 NGO들을 통해 이러한 다소 공세적인 주장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는 내부 작업들을 조용하지만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공세적 논의를 지렛대 삼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의회 내 초당적 이슈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미국에서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달되길 희망한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만큼 중요하고도 상징성을 갖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에 대한 통 큰 합의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2015년 이산가족상봉 당시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 민호식(84) 할아버지가 북측에서 온 민은식(81) 할머니가 열매안고 오열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합의는 인도적 사안이자 인권적 사안이기도 하다. 이산가족 생존자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시급히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기타 생사확인 및 상호 편지교환 등 제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광의의 인도적 사안으로 함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길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자국민 억류자 석방 및 군인 유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6(-7)명의 한국인 석방을 위해 자신의 국민보호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북, 북미 간의 협협상이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실행 가능성 있는 부드러운 인권 문제부터 공식적으로 남북대화 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문제를 우선 의제로 삼아,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소위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적절히 연동시켜야 할 것이다. 법치 지원, 사법행정인력 및 법관에 대한 교육, 국가 인권보고서 작성 지원, 국가 인권행동계획 수립 등 관련 기술협력 경험이 풍부한 유엔 및 유럽 국가들, 그리고 NGO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굳이 인권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당장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죽어가고 종교적 박해로 일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그러한 사안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문제들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면서도, 당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찾아 차근차근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신앙인으로서의 기도

우리는 우선 어렵게 마련된 이번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매몰되어 자칫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무시하거나 잊지 않도록 더욱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든 인권 개선이든 북한 정권, 북한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과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그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결단과 변화를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인권 침해와 종교적 박해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이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얘기를 하자면, 향후 남북이 진정한 화해·협력 단계로 나아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게 될 때, 과거 대량인권침해 사태의 가해자를 어떤 수준에서 처벌하고 어떤 수준에서 용서하며, 또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고, 또 진실은 어떻게 규명하고 기록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지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얼마 전까지 국제범죄자로 낙인찍어 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현재 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김정은에 대한 형사처벌과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이대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형사처벌을 안하는 것이, 혹은 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책임 추궁(형사처벌, 응보적 정의)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실 규명 및 피해자 구제(진실화해, 회복적 정의)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고민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북북 갈등 해결과도 관련된 이러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차원에서의 총체적 접근법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시에 체험하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부터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 나의 출애굽기 (6)

● 드보라

공안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다시는 푸른 하늘을 못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곧 이어 두고 온 딸이 생각났다. 이제 막 돌을 넘긴 우리 딸... 아직 젖도 때지 못한 딸아이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는 막무가내로 잡아가는 공안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나 잠깐 할말 있소. 우리 딸이 지금 막 돌이 지난 간난 아이라 아직 젖도 때지 못했소. 나 좀 보내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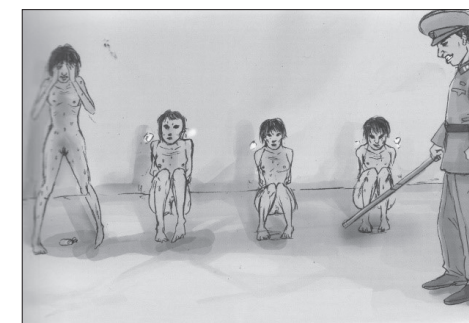
그렇지만 공안은 매정하게 무조건 조사부터 받으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으러 공안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거리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 날 조사하는 공안은 집에나 있지 왜 나왔냐, 왜 한국 가려고 했냐 라고 계속 질문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형편이 어려워 돈 벌러 나온거다. 라고 계속 울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울부짖음은 통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나에게 “북한 갔다가 2달이면 온다 걱정하지 말라, 이번에 오면 다른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하고 위로인지 놀리는 것인지 모를 말을 하며 나를 구류장에 집어넣었다.

구류장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여러 중국 여성들이 나와는 다른 죄목으로 갇혀있었다. 구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 조선 처자가 여기 왜 왔는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어쩌다 잡혀왔는지 감이 없었다. 그때 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여성들이 나를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했던 브로커의 인상착의를 물어봤다. 내가 이리이러하게 생겼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곳의 여성들은 대변에 “그놈이 스파이네. 그 영감 지금까지 많은 탈북여성들을 신고해서 잡아넣었을꺼여” 하며 “그 놈 이리 악하게 굴면서 얼마나 잘사는지 보자” 하며 내 대신 화를 내었다. 알고 보니 그 브로커는 술한 탈북 여성을 신고해서 잡아 넣은 전문 스파이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 스파이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표출할 정신조차 없었다. 내가 하도 울기만 한니까 구류장에 계신 분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위로하면서 다시 넘어올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5원 10원씩 돈을 모아서 줬다. 그때 당시 나는 한국에 넘어갈 생각으로 집에서 추수하고 번 돈 1,500원을 숨겨온 상태였기에 구류장의 언니들이 주는 돈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많은 격려가 되었다.

내가 잡힐 때는 대대적인 북송이 있었던 시기였다. 북한과 중국의 연합 작전으로 수많은 탈북자가 잡혔고, 중국 국경 변방 경비대로 이송되었다. 우리는 1주일 만에 북송을 당했다. 다리 건너 북한 땅으로 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북송을 당하면 먼저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에게 쌍욕을 하면서 혹시 중국에서 숨겨온 돈이 있으면 지금 바치면 40%는 국가에 바치고 60%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며 돈 숨긴 것을 내놓으라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개중에 몇 명이 돈을 바치기도 했지만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어서 신체 검사를 빙자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보위부원의 지시를 따라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야 했다. 옷을 다 벗자 이번에는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고문을 시켰다. 소위 펌프 고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보안서 조사과정에서 옷을 벗고 펌프 고문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 그림 (출처: 살려주세요 전거리고화소 편)〉

나는 집에서 가져온 돈을 자궁 안에 감춰 놓았었다. 혹시나 그 돈이 빠질까 조마조마해가며 앉았다 일어났다는 하기 시작했다. 보위원은 300번 앉았다 일어났다는 시켰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보위원의 푹바로 하라는 호통 소리였다가 붙잡힌 이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약한 상태였던지라 곧 머리 속이 새하예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갔다. 돈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지만 한 50번쯤 했을까... 아니나다를까 자궁 안에 숨긴 돈이 푹 떨어지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아직 간부가 안봤을 때 다시 숨기려고 손으로 돈을 집으려고 했지만 간부의 발길질이 먼저 날아왔다.

“이 간나 XX, 이 더러운 돈 좀 보라우, 어딜 속이고 돈을 숨기고 있는기야!”

결국 나는 돈을 다 뺏기고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 때리는 매도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내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위부 감옥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땀내,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잘 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어서 다리 위에 다리가 겹쳐서 누웠다. 식사시간이 되니까 밥을 주는데 밥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물건이었다. 누런 옥수수 국수를 물을 한 가득 해서 끓인 것인데 국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국 안에 국수 형체가 남은 것이 없고 국물 색깔만 누런 빛이 있었다. 게다가 국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그것을 작은 공기예다가 3-4숟가락 퍼주면 쭉 마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 냄새가 매스꺼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내가 코를 막고 불편한 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옆에서 안먹을꺼면 자기 달라고 했다. 그 친구는 내 밥그릇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그 국물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이렇게 밥을 한끼 안먹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배가 고팠다. 별이 머리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조사를 받고 자백서를 써야 되는데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무리 냄새가 고약하고 먹을만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식사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는 눈 딱 감고, 코 막고 그 옥수수 국수 죽물을 쭉 들이켰다.

식사를 하고 2-3시간 정도 흘렀을까... 뱃속이 엉망이 되었다. 계속 화장실에서 설사를 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을 붙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도 먹어야 되니 식사시간에 나오는 죽물을 계속 먹었다. 그렇게 먹고 설사를 하기를 3일을 정도 지나니 항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날도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어지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이년이 아직 안죽었다...' 하고 수근거렸다. 알고 보니 화장실에서 쓰러진 나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끌고 왔지만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날까지 깨어나지 않으면 사체실에 끌고 갈 것이었다고 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다. 간수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더니 "이 간나 뒤지지 않고 살았네 명도 길다." 하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쳤다.

깨어나서 내 처지를 곰곰히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체포와 복송, 조사와 고문을 겪으며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 섭섭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깨어난 사람에게 명이 길다며 조롱하며 지나가는 간부의 모습에서 조국이 나를 심하게 천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다. 비록 탈북은 했지만 내가 조국이 싫어서 강을 건넌 것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시골 깡촌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지적하고 김정일을 욕할 때 앞장서서 김정일 장군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지 아느냐며 변호했고, 어머니 조국을 그리워했다. 탈북하기는 했어도 내 나라 내 조국 잊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악을 쓰며 변호했던 조국은 내가 죽어갈 때 돌보는 시늉도 하지 않았고 약 한 주먹 주지 않았었다. 원래 배신감이 더 억울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서러움과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살아서 이 나라를 고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났을 때까지 사무쳤다.

두려움에 떨다가 갑자기 분노와 고발의 의지가 생기자 이상하게 담대해졌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당시 중국에서 공안들의 추적에 걸려 집에서 잡혀온 탈북 여자는 보통 노동단련대 형을 받았지만 한국행을 하다가 걸리면 알뜰없이 교화소 행이었다. 기간도 최소 4년 이상이었다. 열악한 감옥의 위생과 식사, 심한 강제 노동, 악화된 건강상태 등을 생각할 때 4년 징역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했는데 이후 복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니 그 끔찍함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행을 하다가 붙잡힌 나는 당연히 교화소 행일 것이고, 이 몸 상태로 교화소에 가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했다. 살려면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중에 같이 잡힌 노란 머리 염색한 젊은 처자를 만났다. 이 아이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눈이 툭 튀어나온 아이였다. 비좁은 감옥 안에서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보니 그 아이도 나와 똑같이 탈출할 궁리를 하는 중이었다. 나는 곧 그 아이와 빠져나갈 궁리를 시작했다. 보위부 조사기간에는 감옥에만 갇혀 있지만 조사가 끝나고 집결소로 이동하기 전 대기 기간에는 외부로 노동을 나간다. 소위 꼬빠꾸라고 불리는 외부 노동 때 일을 하다가 기회를 타서 도망가자고 약속을 했다. 문제는 일단 도망을 가더라도 익숙치 않은 지리를 잘 해치고 강변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아이가 자기가 강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중 한 할머니가 붙잡혀왔다. 그리고 옆 남자 감방에서 한 청년이 맞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위원이 "X새끼야!" 하면서 두드려 뺄 때마다 남자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려 웅크렸다. '왜 저 남자는 취조실이 아닌 감방에서 맞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때리는 소리가 멈췄다. 곧 보위원이 오더니 방금 들어온 할머니를 끌고 갔다. 할머니는 20분 있다가 울면서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까 비명을 지르던 청년이 할머니 아들이었다고 한다. 보위원이 청년에게 죄수들이 밥으로 먹을 국수 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 보냈는데 틈을 타서 도망쳤다가 붙잡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칼이 쭈뼛이 섰다. '도망치다 잡히면 저렇게 맞아 죽는구나...' 도망 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생하게 머리 속에 각인이 되었다. 같이 도망가자고 약속은 했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대기를 위한 구류장으로 이동을 했다. 여기서 대기하다가 자기 고향 인근 지역 집결소로 이동해서 형에 따라 교화소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게 된다. 구류장에서는 보위부에서



먹는 것과는 다른 밥이 나왔다. 옥수수 알을 다 털고 남은 속껍질을 분쇄를 해서 2숟가락 정도를 담아주고 소금물을 국이라고 같이 줬다. 먹는데 씹히지가 않았다. 약처럼 조금 먹고 물로 삼키면서 억지로 뱃속에 집어넣었다. 소화가 되는 것이 기적이었다.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나를 간수가 일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도망치려면 나가야 되는데 도통 나갈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회를 못잡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을 나가겠다고 자진해서 손 들었다. 간수는 “이 허약이가 비칠비칠 한 년이 무슨 일을 한다는기야?” 하고 콧방귀를 끼었지만 그래도 나가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행히 간수는 귀찮다는 듯이 그럼 한번 나가보라는 식으로 나를 일하는데 포함시켜주었다.

처음에는 일단 정찰을 했다. 이번에 맡은 일은 마을 안에 간부 사택을 짓는 일이었다. 시멘트가 없으니까 진흙을 풀과 이겨서 벽돌 만들어 집을 지었다. 일하는 장소가 마침 마을 안이었기 때문에 잘 숨으면 도망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같이 가기로 한 노란머리 처자와 2일 정도 껌새를 보았다.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은 상당히 완성되어가고 있어서 잘못하면 작업장이 바뀔 것 같았다. 작업장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도망가자고 약속을 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다. 나는 계획한대로 간수에게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일터를 빠져나왔다. 화장실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골목을 돌다가 한 블록 정도 지났다 싶었을 때 냅다 뛰었다. 약속했던 노란머리 아이도 어느새 따라왔는지 나와 같이 뛰었다. 정신없이 뛰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대낮에 뛰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꼬빠꾸 생들이 도망친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큰일이다. 곧 우리를 추적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뛰다고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허약 상태인 우리가 추적을 따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신없이 뛰었지만 도저히 추적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죽자사자 뛰는데 산 언덕에 옥수수 밭이 보였다. 당시 옥수수 키가 꽤 컸다. 도저히 더 뛸 힘이 없어서 그 밭으로 뛰어들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압록강변 인근 옥수수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추격하던 사람들은 옥수수 밭에 다다르더니 한 고랑씩 붙어서 수색하기 시작했다. ‘난 죽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매를 맞아 죽은 청년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매를 맞더라도 단번에 숨이 끊어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하’ 자도 모를 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신기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은 계속되었다. 옥수수 밭이 해쳐지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몇 이랑 옆에 사람 발이 보였다. 나는 혹시 보일까 싶어서 땅에 코를 딱 박고 엎드렸다.

그 일촉즉발의 때에 아래에서 “야 점심시간이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보초 세워놓고 밥 먹고 와서 찾자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몇 이랑 옆에 수색하던 사람들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보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꼭꼭 숨어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 일어났더니 다행히 함께 도망친 노란머리 처자였다. 우리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보초를 세우지 않고 다 밥 먹으러 내려갔던 것이다. 한숨 돌리고 보니 내 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밭을 해치고 나와보니 우리가 들어간 밭은 농장 밭이 아니고 개인 밭이라 정말 자그마했다. 이 밭에 2명이나 숨어있었는데 안 붙잡혔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기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추적 당하는 장면에서 나는 이 옥수수밭의 일을 떠올렸다.지근거리에서도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의 안위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다윗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구나...’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아직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다. 탈옥범이 나오면 집집마다 숙박 검열을 한다. 그래서 마을에는 숨을 곳이 없었다. 우리는 감히 어디 이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산에 2일간 숨어있었다. 낮에는 꼼짝 하지 않고 있다가 밤에 옥수수 대를 꺾어 먹으면서 버텼다. 그러다가 3일째가 되었다. 더 이상은 버틸수 없다는 생각에 강으로 가기로 했다. 밤이 되어 강을 찾아가는데 큰소리 치던 이 노란머리 처자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안그래도 익숙치 않은 곳인데 밤에 이동을 하다보니 더욱 헛갈렸다.

그렇게 강을 찾아 길가에서 해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야?” 하는 소리와 함께 후레시가 우리 얼굴을 비쳤다. 우리는 너무 놀라 도망도 못가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나를 본 그 사람은 꽃제비인가 하며 고개를 가웃하다가 옆에 노란머리를 한 아이를 보자 도강자인줄 알고 바로 우리를 붙잡았다. 염색 머리가 너무 튀었다. 결국 이렇게 잡히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허탈하고 앞으로 닥쳐올 일이 두렵기도 하면서 ‘왜 이 년은 왜 머리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 고생이냐...’ 하는 생각에 너무 원망이 되었다.

천만 다행으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우리는 도강하려고 도망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배고파서 강냉이대 꺾어 먹으려고 나온 거라고 끝까지 우겼다. 만약 도망치던 그 때 잡혔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것이고 또 강변에서 잡혔으면 정치범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길가에서 잡혔고 3일동안 도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쭙잖은 변명이 먹혀들어갔다. 우리는 도망쳤던 꼬빠꾸 나간 곳으로 보내졌다. 새벽에 간수가 죄수들을 다 깨우더니 우리를 세워놓고 “발로 한번만 차도 명이 끊어질 녀석들이... 어딜 도망을 치냐!” 그러면서 죄수들에게 사상비판 하라고 시키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있는데 죄수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느그들 때문에 잠도 못자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며 욕하기도 했고, “도망을 치려면 제대로 치지” 하는 비판 아닌 비판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큰 처벌 없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에 크게 안도했다. 물론 그 일 이후로 우리는 외부로 일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만 있었다. 그리고는 결국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그때는 비록 생존은 했지만 결국 탈출에 실패했다는 큰 절망감에 빠져있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두려웠다. 그렇지만 그 집결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줄은 누가 알았으랴... 옥수수 밭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다. (계속)



## 1

## 7월 6-7일 폼페이오 방북... 북미간의 이견 확인



〈7월 6일 북한과의 회담을 마치고 백화원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미국 협상팀의 모습 (VOA)〉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6~7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틀간 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기로 한 것은 정상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협의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북미 공동성명 이행 방법을 놓고 양측의 인식과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하게 드러났다.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평양으로 갔지만 예상되었던金正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친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건네야만 했다. 회담후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일본으로 향한 후인 7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했으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불만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은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은 그 역시 CVID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안전보장 등과 관련해선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연합훈련의 일부 중단에 대해 미국 측은 중대한 양보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훈련 재개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담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직접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 증가와 핵시설과 핵탄두 은폐 여부를 추궁했으며 함흥 미사일 공장의 확장 공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은폐하거나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을 가동한 적이 없으며 행해지고 있는 공사 역시 장마에 대비한 공사라고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6월 30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2010년부터 영변 시설의 배 이상 능력을 가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강성’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폴로매트’는 13일 강성이 평양 외곽의 천리마구역에 있다고 전했다.



## 2

## 북미, 9년 만의 장성급회담 개최...유해송환 시기 절차 논의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판문점 회담이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미군 차량이 유엔깃발을 달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북한이 15일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놓고 장성급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와 북한군이 장성급 회담을 가진 것은 2009년 이후 9년 4개월 만이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한 측에서는 판문점대표부(KPA) 소속의 중장이 참석하였다. 두 국가는 약 5천300명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현지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 장관은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회담이 생산적이고 협조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미군 유해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 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이후 차량에 실어놓은 채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VOA/RFA, 7월 15일)

## 3

## 정권수립 70주년 앞둔 북한, 대사면으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

북한이 오는 9월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3년 만의 '대사'(大赦·대사면)를 단행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대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석방자들의 생활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정령은 밝혔다.

북한은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이 있었던 2012년 등 주요 국가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의 대사면은 체제 공고화라는 '정치적 효과'가 필요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대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인 그해 1월 발표됐다. 당시 정령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대를 이어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선대 지도자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대사면 결정도 북한이 '대(大)경사'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내부적 결속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체제 충성도가 약화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통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사면을 통한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단결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부각하면서 이런 의도를 내비쳤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각종 이탈행위를 저지른 일반 사범 이외에 정치범들도 '파격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억류해 온 한국인들을 이번 사면을 통해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억류자들에 대해 사면 후 송환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6일)

4

## 남북 통일농구경기 개최... 스포츠 교류 활성화



〈7월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서 '평화팀' 선수들이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15년 만에 평양에서 열렸다. 남녀 농구 선수단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 등 방북단 101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7월 3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했다.

행사 첫날인 4일엔 양측 선수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 두 팀으로 나눠 혼합경기를 했다. 여자부의 경우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됐기 때문에 미리 조직력을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기로 평가된다.

5일에는 남측과 북측의 남녀 국가대표팀 대결로 치러졌다. 먼저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남측이 북측을 81-74로 물리쳤고, 이어 진행된 남자부에서는 북측이 82-70으로 승리했다. 양측은 이날 국기와 국호 없이 이름과 배번만 새긴 유니폼을 착용했다. 남측이 푸른색(청팀), 북측이 붉은색(홍팀)이었다.

한편 통일농구 참석차 방북한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회동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현지지도 등을 이유로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번 통일농구대회 개최는 김정은 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하면서 이뤄졌으며 남북은 지난달 18일 열린 체육회담에서 평양 통일농구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5

## 한국 "안보정세 감안해 '을지연습' 잠정유예"



〈지난 2016년 한국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차량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VOA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 연습을 일시 유예한 데 이어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7월 10일 브리핑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만·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은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으로 사·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 최대 전시 훈련이다. 2008년부터는 정부 을지연습과 군의 '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 현재의 '을지 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변경됐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과 2차례 계획된 미-한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유예했다.

(참고: VOA, 7월 10일)



6

## 한국 정부, 탈북자 보호신청 기간 3년으로 확대 추진



탈북자가 정부에 보호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을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호대상자가 아닌 탈북자에게도 주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범죄자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자, 또는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한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비보호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입국 후 이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탈북자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신고 기간을 놓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자가 보호를 신청했을 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236명. 이 중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1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대상 탈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보호 결정 탈북자에게는 그 동안 학력 자격인정,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비보호대상 탈북자라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저자: KBS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제작팀, 류종훈 PD  
출판사: 가나출판사  
출판일: 2018년 6월 1일  
가격: 15,800원

최근 북한의 행보는 기존에 알려진 북한의 움직임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그렇지만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과 예상은 쉽지 않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배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다 보니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했는지 등의 배경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조사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북한의 최근의 변화를 탐구하고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인지를 추적하는 시도가 있다.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팀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과 독일의 방송사와 함께 수년간 취재를 벌였다. 그리고 그 취재의 성과를 다큐멘터리 영상 뿐 아니라 책으로도 정리하여 출간했다.

제목 대로 이 책은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정은 위원장이야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이겠지만 혼자 모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꾸린 엘리트 구성원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시도되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북한의 고위 인사들의 변동을 파악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다. 그래서 KBS 제작팀은 색다른 시도를 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집권 7년 동안 김정은 주변 엘리트들에 대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관계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제작팀은 김정은의 현지도 수행자 명단부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등의 북한 미디어 보도에서 김정은과 가까이 있는 엘리트들은 누구인지, 호명된 순서는 어떠한지 등 세세한 부분에 점수를 매겼다. 장성택 숙청이나 제7차 노동당 당대회 등 굵직한 사안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도 쏙아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정은의 측근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엘리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힌트를 제공했다.



〈북한에서 김정은과 가까운 엘리트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추해야 한다. 김정은의 현지도도 그중 하나다. 가장 최근(7월 17일) 보도된 김정은의 삼지연 현지도 모습. 당 중앙위원회 간부인 황병서, 조용원, 오일정, 김용수이 동행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제작팀이 내린 첫번째 결론은 김정은은 의외로 냉철한 지도자라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실무에 밝은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젊은 관료를 중용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으로 주변을 채웠다. 그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숙청을 저지르는 등 김정은이 합리적 지도자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적어도 단순히 핵에 미친 미치광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제작팀의 분석이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더 나아가 김정은과 그 주변 엘리트의 변화, 그리고 노동당의 변화 및 교육제도 등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자신의 야망으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북한의 경제사정은 강성하다고

말하기엔 매우 열악하다. 특히 계속된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다는 것이 제작진의 진단이다.

북한이 겪는 경제적 딜레마의 증거로 이 책은 해외로 수출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외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 몽골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로 노동자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정권이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그렇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착취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취재진은 과감하게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다양한 지역의 북한노동자의 생활 및 노동 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를 시도했다. 지근거리에서 본 북한 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터에서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다. 그나마 받는 돈도 대부분을 국가에 빼앗기고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온 보위성 간부들에 의해 북한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핵실험에 대한 UN의 반발로 제재가 강화되고 해외 북한 노동자도 규제 대상이 되면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졌을 것이다. 계속된 제재 속에서 경제성장 및 강성대국의 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남은 북한의 선택은 외교적인 돌파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정상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연 북한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개발한 핵을 카드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올 4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 직후의 상황까지 반영된 이 책은 김정은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이 2018년 들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한다. 경제적 난관을 헤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자신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김정은의 행보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물론 김정은의 행보가 정말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고 속이는 정략의 계속될 지는 알기 어렵다.

KBS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편집한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는 최근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상당히 간략하고 짜임새있게 분석하고 있다. 시중에 출간된 북한 관련 책들에 비해 군더더기 없고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며 심플한 분석이 강점이다.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생각하며 일독을 권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지만 북미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협의와 대화가 빛좋은 개살구가 아닌 실질적인 핵폐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각국 리더들과 주요 협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구조를 걷어내고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대립 종식과 함께 북한 내 억압적 체제 철폐와 인권 탄압 중단을 통해 북한의 억압적인 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이 교조적인 개인숭배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한반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미제의 종교로, 기독교인을 스파이로 몰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던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박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성도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및 오지에서 믿음을 이유로 형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후손들이 하루속히 풀려나고 무고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온건한 모습을 보이는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주민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북녘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 복송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마땅하지만 최근 북중관계 개선으로 오히려 단속과 체포, 복송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탈북 여성들의 사정으로 인해 사역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에 노출된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박해가 오히려 탈북 여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